

시민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 부산YWCA의 차황면 생태마을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유성희 *

시민운동이 이루고자하는 지역사회의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시민운동이 현장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역공동체운동에 주력하지 못했던 것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했던 기존의 운동방식 때문이었다. 지역사회에서 추진되는 대부분의 시민단체 활동이 일회적인 캠페인이나 주민 동원형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자이면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시민단체가 농촌의 지역공동체를 실제로 조직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시민운동이 지향하는 지역공동체운동의 방향과 공동체 구성에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사례로 선정된 부산YWCA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이나, 도농직거래를 시작으로 17년간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역공동체형성의 노력을 통해 산청군 차황면 일대를 생태적 지역공동체로 전환시켰다. 이 사례에서 시민단체의 지역공동체운동이 주민 리더십과 주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 공동체 스스로가 소통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공동체운동, 지역공동체, 생활협동운동, 주민참여, 리더십

* 대한YWCA연합회

1. 서 론

반세기 이상의 근대화시기에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빈부격차의 확대와 양극화, 무분별한 생태과괴의 문제, 수도권으로의 초집중화,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공동체 회복과 지역 활성화의 시도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정과제로 공동체성 회복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왔다¹⁾.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는 이름의 국정과제는 초기에 지역 간의 경제적, 문화적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중심이 되었으나, 산업과 공간 관점에서의 지역발전 전략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생활공간 틀 짜기’라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을 다시 세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이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개념이 정부차원에서 도출되기에 이르렀다(이종수 외 2007). 마을 만들기는 일본에서 성과를 거둔 주민자치운동인 ‘마치쓰꾸리’ 운동을 번역한 용어로, 지방의 실정에 맞는 지방화 정책수립과 함께 생활자(주민)의 관점에서 지역의 생활환경을 정비해나가는 운동으로, 일상적 삶의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시키거나 만들고 가꾸어가는 운동이다. 우리 정부차원에서 주민운동과 정책, 프로그램의 성격을 모두 포괄하는 국민운동으로(행자부, 2007)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하게 된 것은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이상적인 기

1)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균형발전위원회와 행자부가 중심이 되어 “살고 싶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으로 채택하여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설정된 국정과제는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할 것을 천명하였다(성경룡 외 2004).

대 뿐 아니라 지역의 실제적 요구에서도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지역 만들기 사업은 ‘샬터 만들기’, ‘공동체 만들기’, ‘사람 만들기’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대상지역을 농촌, 산촌, 어촌, 도시로 분류하여 기존 마을의 재생과 함께 새로운 마을 창조의 계획공동체(intentional community)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일률적인 사업 진행과 행위주체의 자립보다 재원지원 기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점, 그리고 운동을 지속시키는 마을의 주민조직화의 어려움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켰다²⁾.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시민운동에서 꾸준히 고민해왔던 주제이다. 풀뿌리운동을 지향하는 많은 조직들이 다양한 영역의 풀뿌리 지역운동을 진행해왔고, 지역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대안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지역공동체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³⁾. 또한 서울의 성미산 공동체를 비롯한 마을 기반의 지역공동체형성 사례는 주민의 주체적인 역량과 조직화의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책사업의 보고서에서 나타나듯, 지역공동체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도시보다 농촌, 어촌 등 경제적,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의 시민운동은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중앙에 집중된 대형 단체들이 시

2) 2007년도 행자부에서 발간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 사례분석에 의하면 총30개의 선정된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의 결과, 고령화로 인한 리더의 비전문화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외부인과 연합체로 구성하는 경우 마을의 전통 및 정체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아 공동체운동의 주체형성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고,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설물을 건축하는데 치중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되지 못했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관련 단체들의 협력관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회적인 프로젝트로 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행정자치부 2007).

3) 지역단체가 중심이 된 대안적공동체운동은 안양, 부천, 광명등 경기권 YMCA의 생협운동, 여성민우회의 지역생협운동, 안성의료 생협운동 등 생활협동조합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외에 한밭레츠(대전), 느티나무도서관(용인), 관악주민연대(서울),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서울) 등이 있다.

민운동의 지방 분산을 막고 있으며,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시민운동이 숙고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주민을 계몽하고 대상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주체로 세우고 조직화 하는 주민자치운동은 가치의 제시 이전에 그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하승우 2007).

이 연구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패러다임으로 지역공동체운동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시민운동이 지역사회변화를 위해 담당해야 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시민단체가 농촌지역 마을공동체를 친환경 생태마을로 전환시킨 부산YWCA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부산YWCA가 지난 17년간의 노력으로 경남 산청군 차황면의 600농가를 친환경농업마을로 변화시킨 사례는 시민단체가 전개한 지역공동체운동의 방식과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⁴⁾ 연구는 문서자료와 2007년11월-2008년 1월에 걸쳐 행한 부산Y와 차황면의 관계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참조할 것이다.

2. 공동체운동과 지역공동체형성

1) 공동체의 개념과 공동체 운동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근대화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변화로 지적되는 도시화에 의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⁴⁾ 경남 산청군 차황면은 부산Y와 관련을 맺기 이전에는 일반농업을 수행하였으나, 부산Y와의 연대 속에서 마을 전체가 유기농으로 전환되었고, 이 결과 2007년에는 농림부와 환경부가 주관하는 ‘친환경농업대상’의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수상자 공적사항에서 산청군은 부산Y와 협약을 통해 친환경농업이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2007.9.21 농림부 보도자료 참고).

비롯된 것으로,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법을 공동체성의 회복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집단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공동체 논의는 사회학의 근간을 이루어 온 사상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며 영향을 미쳐 온 것 중 하나이다(Nisbet 1967). 초기의 공동체 연구는 농경사회의 질서가 산업사회의 질서로 변화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인류의 집단생활이 공동체적인 것에서부터 조직체적인 것으로 이행하게 된 사회변동의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준 학자는 토니스(Tönnies)라 할 수 있다. 공동체의 변화과정을 이념형적 분석틀로 논의한 토니스는 ‘계마인샤프트와 게셀샤프트’로 유럽사회가 공동체(communitas)에서 사회(Societas)로 이행하였다는 것을 설명했다(Tönnies 1957). 이러한 공동체의 논의는 니스벳이 ‘공동체의 재발견’이 19세기 사회사상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발전이었다고 언급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최협 1987).

공동체의 개념은 공동체의 숫자만큼이나 많다는 지적처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집합의식과 결합방식의 변화에 의해 생겨난 공동체의 출현에 의해 공동체의 개념과 관점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공동체 개념에 대해 관해 한 연구 중 힐러리(Hillery)에 의하면 이 개념이 94가지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 공동체를 목표나 규범, 수단을 공동 소유하는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예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공동적 삶을 영위하는 집단, 자족적 집단, 동류의식을 갖고 있는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힐러리는 ‘공동체는 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Hillery 1955).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어의 community를 공동체로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전병재(2002)의 지적처럼 공동체 연구에 있어서 아직도 공동체라는 개념 정의에 대해 확실한 합의가 도출된 상태는 아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지리적 영역(geographical area), 사회관계를 말해주는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그리고 집단 의식을 나타내는 공통의 연대(common tie)의 세 차원은 공동체의 개념 정의에서 중요한 범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인간들의 관계방식이 변화하고 정보사회의 도래로 가상공간이 출현하여 지리적 영역이 충족되지 않아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이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의 붕괴로부터 야기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서로 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신뢰의 회복과 공통의 연대를 가질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지역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성은 순환구조를 이루도록 하는 공동체의 주요 조건이다(이근행 2005).

『오래된 미래』의 저자인 헬레나 오지는 그의 한국강연에서 세계경제 체제에 대항하는 힘으로서 경제활동의 지역화의 담론을 제시한 바 있다.⁵⁾ 그가 제시한 실천적인 전략은 우리가 고민하는 공동체운동의 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스스로의 자각으로부터 새로운 행위와 사고를 도출하고, 새로운 소통과 교류의 관계를 통해 힘을 키워가는 공동의 노력이 새로운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시민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운동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지속가능한 인간사회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5)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회에서 펴낸 『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 이론』에서 공동체를 여러각도에서 다루고 있지만 ‘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시도되지 않았다(전병재 2002).

6) 헬레나 호르베리 호지는 녹색평론이 주최한 <21세기를 위한 사상강좌>를 통해 세계 경제체제에 맞서는 길로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지역화’, 즉 경제활동의 지역화를 강조했다. 이 지역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재건하고, 이러한 지역내 활동이 생태마을과 생태공동체의 창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녹색평론」 75호, 2004.3-4월호)

방식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작용과 연대의식을 강조한다. 이것은 하버마스(Habermas)가 제시한 생활세계의 자율적 삶의 가능성을 복원하는 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초점을 국가를 비롯한 사회체계의 폐지나 재편보다는 생활세계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생활세계적 삶의 복원에 집중시키는 것이다(이동수 2002).

박주원은 ‘공동체’의 이념을 기존의 ‘국가’와 ‘사회’가 아닌, 그리하여 보편적 권력이 아닌 독립적이고 분권화된 소규모의 자치적 정치공간의 이념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작게 분산된 권력이나 지역으로 분산된 정치적 공간이란 공동체운동이 가지는 한계가 아니라 공동체운동이 다른 여타의 비판적 사회운동과 구별될 수 있는 ‘공동체’의 이념이자 그러한 공동체가 ‘대안’적일 수 있는 본질적 특성으로 보면서, 대안 공동체론에서 ‘공동체’개념이 가치의 상포 호혜적인 교류를 통해, 그리고 독립적이고 분권적인 정치적 자치 질서를 통해 그 ‘공동체’성을 지향한다고 본다(박주원 2008). 대안공동체는 스스로가 비판과 저항의 운동과 달리 스스로가 ‘대안’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공동체운동은 국가와 시장을 보완하는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주체적인 역량으로 새로운 삶과 관계를 구성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공동체운동의 흐름과 생활협동운동

한국에서의 공동체운동은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로 해체된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실천으로서 주거, 교육, 의료, 문화, 환경, 자치, 생산 및 소비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동체운동의 개념과 유형화도 그 숫자만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근행은 한국의 공동체운동을 계획공동체, 종교·영성 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생태마을, 교육공동체, 협동조합공동체, 공동주거공동체, 지역화폐운

동, 소액신용금융, 지원공동체의 10개로 분류, 공동체운동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이근행 2006). 최병두는 공동체운동을 사회공동체, 생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운동으로 분류하면서 각각의 운동의 기반이 되는 자본의 유형을 분석하고 있다(최병두 2006).

공동체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운동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생태적 공동체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고(정규호 1994; 구자인 1996; 최협 2001; 황대권 2004; 이근행 2006), 생활협동운동으로서의 접근(김양희 1992; 정진성 1996; 문홍빈 2000; 김현옥 2006), 주민자치운동으로서의 접근(정외영 1999; 한국도시연구소 1999)등이 각각의 관점에서 공동체운동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사회운동영역에서 큰 관심을 모은 성미산 공동체 사례는 사회적 자본 및 학습공동체의 이론 틀로 운동의 과정과 성과를 분석하기도 하였다(김상민 2005; 이현애 2004; 김종욱 2004).

이 외에도 다수의 학위논문들이 공동체운동을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독자적인 공동체운동의 ‘운동론’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연구들이 기존의 이론과 실천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서구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있어 운동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체운동 중 생활협동운동(이하 생협)은 우리 사회가 고도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1980년대 중반 우리 사회에 등장했다. 그 이전에 소비자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직거래를 중심사업으로 하는 생협의 발전은 1986년 ‘한살림’의 등장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도농 생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친환경유기농식품 직거래를 시작하였다. 그 후 생협은 생산자와 함께 국내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지하는 사회변혁운동으로 변화되어 왔다.

생활운동은 “5-10명의 작은 공동체를 단위로 나눔과 협동을 실천하고 나아가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를 가짐으로써 개인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바꾸려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주부들 중심의 무점포형 공동구매”(김양희 1992)의 운동을 중심으로 시작하나,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인간적이며 유기적인 삶의 회복”을 지향한다(문순홍 1992). 이 정의로 볼 때 생활협동운동은 지역에 기반을 둔 생활인들이 신뢰와 협동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운동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살림의 관점은 밥상을 구성해 주는 농산물을 친생태적인 것으로 택함으로써, 이를 통해 시장에서 교환되는 상품의 종류를 소비자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결정이 생산자의 결정에 영향을 주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해당 사회의 생산물품과 생산방식의 선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공동체형성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운동은 일본의 생활클럽운동에서 명확한 방향과 유형을 찾을 수 있다. 생활클럽운동은 산업화와 물질문명으로 인한 자연 및 인간의 파괴, 도덕성이 상실된 유해상품의 범람, 인간의 도시집중과 도시의 비인간화 등으로부터 자신의 건강과 생활을 스스로 지키자는 차원으로 지역운동에서 출발하여 생활문화운동과 정치개혁운동에까지 발전하였다(정진성 1992).

궁극적으로 생활협동운동의 전략은 일차적으로 유통과정을 개선시킴으로써 한편에서는 도시소비자를 공동체의 한 형태인 소비공동체로 묶어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농촌 생산자를 생산공동체로 묶어 낸다. 이어 소비자공동체와 생산자공동체를 생산지 방문, 교육, 토론 등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지움으로써 상품경제에서 가지고 있던 상호불신을 신뢰로 바꾼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양쪽의 공동체 모두 새로운 가치관에 의거한 의식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생활문화가 정착되고 새로운 공동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문순홍 1992).

3) 지역공동체형성의 의미와 과정

지역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정주 단위를 기초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지역공동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산업화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형성이 제시되기 때문이다(최병두 2006). 사회운동에서도 지역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늘 주목 받아왔고, 최근에는 사회운동의 지역화가 다시 강조되고 있다(김정훈 2007).

이처럼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 형성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복원에 대한 논의가 전통적 공동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 이전의 공동체적 전통사회가 유토피아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삶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사람들에게는 공동체적 결속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연구주의로 인한 전통적 공동체의 문제는 집단 이기주의로 변화될 수 있다. 공동체가 가진 폐쇄성과 배타성, 침체성과 복고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의 고민이 지역공동체형성 논의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재열은 지역공동체의 양면성을 퇴니스와 뒤르켐, 박승관(1994)의 개념을 빌어 이익사회(gesellschaft)가 아닌 공동사회(gemeinschaft), 기능적 분화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 연대가 아닌 공통점에 기반을 둔 기계적 연대로 설명하면서, 공동체가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선 열린 결사체로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에 기여할 수 있을 때 복원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이재열 2006).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인 민주주의, 사회적 정의, 형평성, 공정성 등이 확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가치가 면면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되고 유지되며(강은숙 2003), 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 지향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제시한 푸트

남(Putnam)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도록 만드는 신뢰, 규범, 연결망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질”(Putnam 2000)로서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공공선의 구현을 용이하게 해주는 집단적 신뢰관계를 의미하며, 지역 간에 경제성장이나 정책효과의 뚜렷한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도 간주된다. 특히 결사체 참여의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이기적이고 단기적인 관심을 넘어서서 장기적이고 공동체적인 문제를 향해 이익들을 조율해 나가는 가치와 규범을 내재화되는 경험이 축적되고 강화된다(이재열 2006). 시민운동이 지향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에서 지역이 강조되는 이유는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역성으로 인해 주민들 상호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지속적 창출과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신뢰(trust)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1〉 지역공동체 형성 모형

구 분	주민자치모형	관리주의모형
핵심초점	지역주민에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영향력과 권한 부여	서비스전달체계의 중요성
실천전략	자치력을 가진 주민 조직화	민관의 협력으로 서비스 제공
운동주체	지역주민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행정기관
자본의 유형	사회적 자본 결사체적 지역 거버넌스 구성	사회적 자본 민관 협력시스템 구성
성과의 기준	개인(의식)의 성장	복지서비스의 향상
참여방식	직접참여	간접참여
지역의 의미	자치공동체 의식 함양	복지서비스 혜택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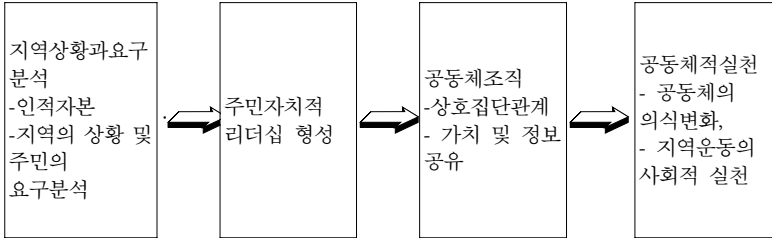
출처 : 최병두(2006)가 제시한 표의 구분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결사체적 지역 거버넌스’(associative local governance) 개념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확대시키는 도구로 형성된 개념이다(김영정 2006). 결사체 거버넌스는 지역의 내생적 변화에 필요한 주요 자원을 모으는 시스템으로,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공동체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타결하는 참여민주주의 훈련과 주민자치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병두는 지역공동체형성을 위해 자치단체나 시민단체의 촉매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먼저 주민들과 관련 단체들에 의해 자치거버넌스를 위한 자조조직이 구축되어야 하며, 그 속에 내재된 신뢰, 호혜성, 상호협력 등 사회적 자본의 주요 자원들을 동원하여 공동체적 전략과 행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최병두 2006).

이재열은 지역사회발전에서 조직화와 리더십의 문제가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조직화와 리더십은 공동체 성원들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사회적 자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 핵심은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리더십인데, 이를 위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와 그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횡적인 유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이재열 2006). 지역의 시민단체는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정부조직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적 이슈에 대한 주민들의 민감성과 반응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공동체형성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자치조직이 형성됨으로써 공동체적 전략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형성에서 중요한 요소인 조직화와 리더십의 배양을 위해서 사회적자본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주민조직의 역량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1〉 지역공동체형성과정



3. 부산YWCA의(이하 부산Y)의 지역공동체 형성과정⁷⁾

1) 사례조직 개관 - 생협활동을 중심으로

사례조직인 부산Y는 전국적 시민단체인 대한YWCA연합회(이하 Y) 산하의 지역 회원단체이다. Y는 전국 56개의 시단위 지역조직이 연합한 여성운동단체로서, 약 90,000명의 회원이 지역Y에 가입하여 여성, 환경, 평화, 생명, 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종합적 시민운동단체이다. 부산Y는 대한YWCA연합회에 소속된 지역Y 조직 중 회원수 및 활동의 규모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는 조직으로, 지역활동으로 어린이집과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Y는 1946년도 창립 이래 생명운동과 공동체운동을 운동의 중심주제로 설정하였고, 특별히 1970년 부산지역 최초로 소비자 운동을 시작, 소비자 상담실의 지속적인 운영과 소비자 교육, 생산자와의 교류활동을 추진해왔다. 소비자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부산Y는 지역과 환경의 공존을 위한 운동의 전략으로 생활협동운동을 채택, 1987년부터 유기농산

7) 이하의 논의는 부산YWCA 60년사와 총회자료를 참고로 기술하였다.

물 직거래 운동과 생산지 방문, 생산자와의 교류 등을 시작했고, 생산지를 확보한 이후인 1992년부터 생활협동조합 회원을 조직, 그해 8월부터 조합원들에게 생활재를 공급함으로써 생협운동을 시작했다.

부산Y가 생협운동을 시작한 배경은 소비자운동의 확장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비자들이 먹을거리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도 보상을 받거나 근본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소비자운동을 생명운동과 연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식품으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던 중 부산Y는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먹을거리를 직접 선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 이사와 위원들이 농산물과 관련된 연구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지역공동체 조직과정 - 시민운동과 지역의 만남

1985년부터 시작된 유기농가와의 직접 교류는 부산Y가 지역공동체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유기농은 1973년에 발족된 정농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한국에서의 유기농업은 단순히 농업을 경제행위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대안농업패러다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유기농을 시작한 정농회와 한살림 등의 조직은 스스로를 농민단체가 아니라 생명단체로 규정하고 있다(허미영 2005). 이러한 유기농의 정신을 익히게 된 부산Y는 경남 지역의 유기농 농가와의 직접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일반 농법이 아닌 생명 농업을 고민하고, 생명의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제일 먼저 갔던 교육이 농약 안치는 교육이었습니다. 밀양, 창녕, 고성, 진영 등지에서 개별로 농사를 짓던 분들이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여 모임에 가서 만났습니다. 1985년에 밀양에서 열렸던 모임이었는데 이분들의 구성을 보니까 농약 중독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 우리 먹는 것이라도 잘 지어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적고, 인정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산Y 하선규 사무총장 인터뷰 자료 중)

당시 교육에 참가했던 부산Y 사무총장은 이들을 제도적으로 도우면서 함께 변화될 수 있는 운동의 방식을 고민하던 중 Y의 이름으로 농산물을 팔아주는 조건으로 농산물에 실명을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 것이야 말로 책임을 지는 일이라는 생각에서였지만, 농민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자, 이름을 알림으로써 소개하기 쉽고 유명해지는 방법이라고 설득하여 실명을 적은 농산물을 부산Y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소비자운동에서 보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이유 뿐 아니라, 생산자들도 더 책임있게 먹거리를 생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였다. 이것을 계기로 부산Y는 3년간의 농산물 직접 판매를 진행하면서 경남지역의 생산지 현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지도자와 회원들을 위한 교육은 친환경과 먹거리를 주제로, 회원행사는 산지 견학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표 2〉 생협조직 초기의 부산Y 회원과 지도자 교육, 1987-1991

년도	참가대상	교육내용
1987	이사 및 위원	농산물 농약 오염 현황 교육
1988	총회원	총회시 무 저농약 농산물 재배 현황 교육
	회원	무농약 포도단지 현장 교육
1989	회원	‘식품과 공해’ 주제의 교육 (회원의 날)
	회원	환경과 바른 먹거리 주제의 회원대회 개최
1990	이사 및 위원	무저농약 농산물 생산운동에 대한 연구모임

	부산지역목회자	무저농약 농산물 생산 및 판로개척을 위한 모임
	경남 의창군 농민	농산물 농약오염 주제의 농민교육
	회원	저농약 사과 생산지 견학(경북 청송)
	회원	저농약 밀감 생산지 견학(경남 통영)
	회원	바른먹거리 운동 주제의 회원대회 개최
	이사 위원	‘바른먹거리 운동으로 생명문화운동’ 주제의 이사위원 훈련
1991	위원	사회문제부 위원 일본 후쿠오카 생협견학
	회원	생명운동과 수입식품 주제의 회원교육
	회원	생산지 견학 2회
	일반인	환경교실
	생협회원	한국유기농업 환경연구회 방문 교육
	군인가족	군인가족 환경교육 실시
	생협회원	유기농업과 생명운동
	회원	무저농약 농산물 생산지 견학(차황면)
	일반인	무저농약 이용 확산을 위한 소비자 교육
	이사위원	유기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위한 연구모임

다양한 생산지와 연대를 맺게 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Y에 대한 거부감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은 부산Y가 가진 공신력과 조직력 때문이었다. 오랜 기간 지역시민단체로 활동해 온 Y의 이름을 대부분의 농민들이 친근하게 느꼈고, 부산Y는 회원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지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었다.

산지의 견학은 부산Y 지도자들에게 농촌공동체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였다. 회원들은 생산지 방문을 통해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절감하였고, 부

산Y는 농촌공동체를 지원하고 이들이 자립적으로 힘을 갖도록 돕는 일이 도시의 소비자들을 살리는 길과도 연결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여성운동인 Y가 농촌을 살리는 일에 사명감을 갖게 된 것은 기독교 내부에 깔려있는 생명존중의 사상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Y의 신념이 생명운동을 표방하는 유기농운동과 연결되고, 농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부산Y 생협은 도농교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3) 지역공동체 조직과정 - 리더십 발굴과 육성

지역공동체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주민 리더십의 형성이다. 산청의 차황면 생태마을은 시민단체가 생산지의 주민 리더십을 찾은 후, 교육의 지원을 통해 세워진 주민 리더가 지역공동체운동을 이룬 사례라 할 수 있다.

1990년부터 시작된 부산Y유기농산물 직거래 코너는 도시인들에게 경남지역의 유기농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이 알려진 후 같은 해 경남 산청 농협으로부터 산청의 쌀 판매의 요청을 받게 된 부산Y는 경남 산청의 생산지를 견학하게 되었다. 당시에 이미 농촌에서는 고령화의 문제가 시작된 터라 농촌에서 젊은 인력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현재 차황면 메뚜기쌀 작목반을 이끌고 있는 김경규씨는 당시 39세였는데, 울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29세에 귀농을 한 차황면의 주민이었다. 당시 그는 친환경과 유기농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Y 하선규 사무총장으로부터 유기농 교육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산청에 가보니까 물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좋은 쌀이 나올 것 같았어요. 거기서 김회장(김경규)을 만났는데, 사람이 젊으면서 한눈에 봐도 똑똑해 보여서 이 사람에게 유기농을 하도록 권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해보니까 유기농을 지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데, 공부할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김

경규씨를 처음 만난 날 집 앞 산등성이에 앉아 같이 밥을 먹으면서, 당신이 농약을 안치고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다 팔아줄테니 교육을 받지 않겠느냐,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소출이 3년 동안에는 아마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먹고 살 수는 있겠느냐,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더니,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니던 교육과 경남지역의 농민들 모임에 매년 참석을 시켰고 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선규 사무총장 인터뷰 자료 중)

부산Y가 생산자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생산자들과의 만남이 지속되면서 농민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한 유기농의 확산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생협운동 초기에 부산Y는 농민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농민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질이 떨어지는 농산물로 인해 피해도 많이 입었다.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농민들과의 관계를 지속했으나, 개별 농가를 하나하나 관리하는 일은 부산Y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Y는 경남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농민교육을 계획하였다.

당시 유기농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기농운동이 가진 특징 때문이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생산자의 유기농업은 1980년대 이후 소비자운동과 일체화하여 ‘생명운동’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기농업운동은 농업생산에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수확품종을 보급한 정책에 저항하여 증산정책에 반박한다는 이유로 이념적 행동으로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정은미 2006). 그러한 과정에서 유기농업 기술과 사상은 정농회(1976), 한국유기농협회(1978)등 생산자 스스로가 결성한 단체에 의해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사회에서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촌의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하여 여러 지원책을 고민하던 중이라 부산Y가 계획한 농민교육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도 전달이 되어 교육비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경남에서 유기농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농민들 중 200명이 참가를 신청했고, 이들을 교육하는 2박3일의 일정을 부산 Y가 주관하게 되었다. 이 교육을 계획한 부산Y는 일반화된 교육의 틀을 탈피하여 농민들에게 최고의 대우와 교육내용을 제공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당시 진주에서 가장 좋은 호텔인 동방호텔을 교육지로 선택한 후 도지사와의 협의 끝에 도청의 환영만찬까지 제공받게 되었다.

“나는 그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애국자 모임에 도지사가 만찬을 줘야 한다는 생각에 경남 도청을 찾았지요. 그랬더니 담당 국장님이 농민들 교육을 하는데 체육관에서 하면 되지 무슨 호텔이냐고 해서, 경상남도의 수입원의 근원이 뭐냐, 농민들 대우 안하면 별 받는다요 했습니다. 경남의 주 수입원이 농사인데도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불가하다는 생각에 계속 항의하니 결국은 만찬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도지사가 준비한 만찬도 먹고, 당시 최고의 박사님들을 모시고 각각의 농작법 강의도 하고, 각자가 재배하던 곡식을 다 가져오게 해서 유기농협회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교육도 했습니다.” (하선규 사무총장 인터뷰 자료 중)

당시 교육에 참가했던 한 농민은, 생전 처음 가본 호텔에서 화장실 사용법을 몰라 밤새 고민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동방호텔의 전 객실을 채웠던 그 교육을 통해 농민들은 인간적인 대우와 최고의 교육에 감격했다고 한다. 김경규 회장도 당시 교육에 참가했었고, 교육 이후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부산Y도 산청을 지원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김경규씨와 약속한 3년 동안 김씨의 집 앞 콩밭까지 부산Y에서 팔면서 3년의 기간을 지켜갔다고 한다.

“3년 동안 김경규, 정말 힘들었지요. 아버지가 물려준 논마지기 다 날릴 거라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소출된 것을 Y에 가져왔는데 다 안 팔릴 때는 너무 미안해서 얼굴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못 팔아줘도 불평한번 안했던 김경규의 운동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 운동이 자기와 가족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하선규 사무총장 인터뷰 자료 중)

4) 지역공동체 조직과정 - 운동의 확장을 통한 자립기반 형성

지역공동체와 만나는 프로그램은 도시 소비자 교육을 겸한 산지 견학과 어린이들의 캠프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였다. 이 중 어린이 캠프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캠프 도중 메뚜기를 발견한 부산Y는 유기농으로 전환한 땅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1994년부터 메뚜기 잡기 대회를 대외적인 행사로 시작했다. 다량생산으로 황폐해진 땅을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긴 시간을 투자하는 청년의 이야기는 뉴스에 보도되었고, MBC가 기획방송 제안을 했다. 당시 방송에 동원된 차량만 10대 가량 이었고, 메뚜기 잡는 아이들의 모습이 전국적으로 방영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95년부터 외부에서 참가하는 메뚜기잡기 대회는 매년 1,000여명까지 참가하는 지역의 명물 행사가 되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군과 농협까지 가세하여 너무 붐비게 된 결과 농사에 도리어 해가 되어 행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부산Y에서는 산지의 변화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했다. 유기농산물 판매 매장도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던 중 김해의 농가에서 농수산물을 다른 것으로 바꿔 판매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유기농업에 종사하지 않던 농민들이 이를 언론에 제보해서 부산Y 생협이 타격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 인증제도와 실명제의 필요성을 절감한 부산Y는 인증제도를 농림부에 제안하게 되었고, 1993년에 농산물 품질인증제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또

한 정부차원의 유기농 지원부서의 필요성을 제기, 유기농협회와 함께 농림부에 유기농 담당 부서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결과 1991년, 농림부에 ‘유기농업발전기획단’이 설치되었고, 1994년에 농림부에 ‘환경농업과’가 설치되었다.

〈표 3〉 친환경농업정책의 성립과정

년도	주요내용
1976	유기농업의 조직화(1976년 정농회 창립, 1978년 한국유기농업협회 창립)
1986	유기농산물 직거래 소비자단체 등장(한살림 1986년)
1991	농림부에 ‘유기농업발전기획단’ 설치
1993	품질인증제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농산물 등 3종류) 실시
1994	농림부에 ‘환경농업과’ 설치
1996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 환경정책 발표
1997	‘환경농업 육성법’ 제정
1998	환경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명칭 변경
1999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행
2001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수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출처: 정은미 2005, 127의 표를 재정리.

유기농산물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판매의 위험부담이 커서 초기에는 농협이 유통을 기피했다. 이에 따라 생협 등 유통조직이 직거래 유통을 하게 되었는데, 어려운 조건에서도 유기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낮고 병충해, 기상 변화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약소비처 없이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시도하거나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생산비가 일반농산

물보다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생산자가 가격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사정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래형태가 되어야 재생산이나 지속적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산자와의 직접 교류를 통해 생산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갈 수 있고, 친환경 유기농업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기본적인 생각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친환경유기농산물은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시장경쟁가격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의 친환경유기농산물 구매의사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래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조완형 2005).

유기농산물 직거래는 ‘한살림’과 다양한 생협조직들에 의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을 위한 유기농산물 직거래는 큰 호응이 있었으나, 생협이 유기농산물의 수집, 매입에서 배송까지 모두 담당하는 유통경비의 고비용·비효율적인 구조가 유기농산물의 가격을 높여 소비자가 생협운동에 참가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이루어졌다. 부산Y도 산청 뿐 아니라 다양한 생산자 그룹과 개별적인 직거래를 하면서 필요이상의 물류비가 발생하여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부산Y는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는 한편, 산청 등 유기농산물 재배지역은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할 수 있는 자립적인 구조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메뚜기를 상징으로 잡아 산청의 쌀 브랜드 이름을 ‘메뚜기 쌀’로 명명하고, 도시의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쉬운 형태의 소포장 형식도 개발했다⁸⁾. 메뚜기 쌀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유기농이유식 회사의 계약재배도 이루어지게 되어 친환경 농업의 자립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8) 곡류 소포장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90년 초반부터 산청과 부산Y는 다양한 규모의 소포장을 실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판매방식을 실천하였다. 당시 쌀 등 곡류를 판매하는 단위로는 kg보다 ‘되’를 많이 사용했는데, 처음으로 8kg 단위의 포장을 시작했을 때 소비자들 뿐 아니라 생산자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부산Y이사회는 부산Y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모든 식자재를 친환경으로 바꾸기로 결의, 식자재를 친환경 농지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했다. 2004년 한 해 동안 친환경 식단을 시험 운영한 결과, 200명의 원아를 기준으로 월 4,000원씩의 추가 비용이 지출되었다. 학부모들에게 1년의 식단과 친환경 자재의 내용, 식자재 양을 설명하자, 학부모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에 유치원 원아 1인당 월 1000원 지원의 친환경지원운동을 제안해서 부산시의 한개 구청이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Y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연대 활동을 시작, 학교의 급식재료를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먹거리로 제공하는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5) 지역공동체 조직과정 - 주민자치적 조직체 구성

2007년말 현재 차황면의 유기농가는 면 전체의 87%에 이른다. 1990년에 김경규 1인이 시작한 유기농가는 이듬해에 5농가로 확대되었고, 1997년에는 차황면의 50%농가가 참가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고, 친환경농업육성정책(1998)이 시행되면서 농가의 참여도 매년 증가하게 된 것이다. 차황면의 메뚜기쌀 작목반은 친환경쌀 생산조직의 현황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생산지로 기록되고 있다.

〈표 4〉 친환경 쌀 생산조직의 개요

조직명	연도	조직배경	인원	대표자
감물흙살림영농조합	2002	(괴산)감물면내 12농가 흙사랑 감물모임을 조직, 친환경 농업시작	85	이도훈
산계뜰친환경영농조합	2005	(옥천)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구성	100	이선우
친환경농업쌀작목반	2001	(익산)응포면내 정농회원 중심으로 조직	38	최용배

신광신여성정단지	2001	(함평)신광면 신여부락내 친환경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	11	김중연
친정선물쌀고방단지	2003	(진도)진도군과 농업기술센터 진도쌀브랜드 사업에 따라 고방단지내 전구성	15	박용준
황산 쌀 전업농회	1995	(해남)황산면 전업농회 중심의 정부지원과 함께 2002년부터 본격 친환경 농업 시작	51	김채만
명동리친환경작목회	1994	(홍천)생태보전 및 생명운동의 차원에서 시설재배농업인 중심으로 시작하여 일반농사 농업인으로 구성	60	연익흠
황산들 영농회	2000	(논산)친환경관심농업인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조직, 시행	26	송원빈
용추유기농쌀작목반	1998	(함양)유기농업협회안의지회소속농가 들중심으로출발, 안의면전업농참여확대	100	양기조
메뚜기쌀작목반	1989	(산청)대표자주도, 차황면 내 농가를 대상으로 조직, 확대	420	김경규

출처: 농림부 2005.

차황면에 결성된 메뚜기쌀 작목반은 김경규씨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부산Y가 주관한 농민교육에 참가한 직후 친환경 조직으로 전환시킨 차황면의 생산자 조직체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산청의 친환경 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은 부산Y가 5년간 전매를 했다.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자 부산Y가 시내의 백화점 2곳 앞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도록 주선해주었고, 그곳에서 소비자와 농민이 만나는 행사를 가졌다. 그것이 유통의 시작이 되어 한살림의 생산지로 선정되고, 푸른생협과 2개의 분유회사 이유식 생산지로도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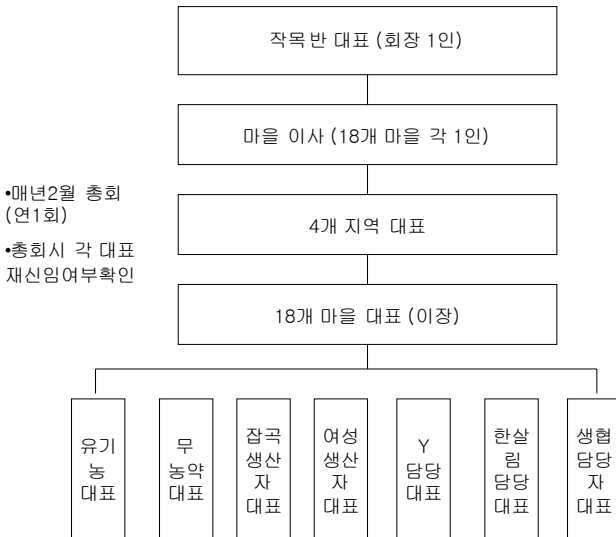
유통의 통로가 확보되자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현재는 450ha가 친환경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중 250ha는 유기농 인증, 200ha는 무농약 인증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전국의 인증 면적이 약 30,000ha인 현실에서 볼 때 600농가로 구성된 한 개의 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농사

면적의 0.01%에 이른다는 것은 큰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변화되는 현실에서 생산과 유통, 판매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외부의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의 필요성은 어느 것보다 절실한 요구였다. 메뚜기쌀 작목반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김경규 회장이 주도하여 마을단위 생산자들을 조직하여 구성한 독립적인 기구이다.

메뚜기 쌀 작목반은 2007년 현재 치황면의 19개 마을 중 18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김회장이 살고 있는 마을만으로 구성했으나, 가격이 보장되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김경규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매년 재신임을 받고 있다. 현재 추측이 되는 생산자의 연령층은 60로, 생산자들이 대표가 되어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2〉 메뚜기쌀 작목반 조직 구조



작목반 구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많은 대표들이 리더로서 조직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각 마을에는 약 15호의 농가가 거주하고 있는데, 각 마을단위로 한명의 책임자가 있고, 책임자는 교육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18개 마을은 다시 4개의 지역으로 분류되어 지역의 대표를 선정하고, 긴급한 일은 4개 지역대표와 마을 이사들이 논의해서 결정한다. 마을대표와 분리되는 마을이사는 작목반을 책임 맡는 ‘이사’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마을대표와 이사를 분리함으로써 더 많은 리더를 훈련시킬 수 있고, 의사결정에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주민들이 자신들이 리더로 교육받고 역할을 수행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자부심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 조직을 담당하는 담당대표들을 선정함으로써 대표 중심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수확품의 품질을 책임맡는 대표들도 매년 수확된 농산물들을 모두 사전에 확인하여 농산물의 질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⁹⁾.

메뚜기쌀 작목반이 가진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외부의 조직과 연결되지 않은 순수하게 독립적인 생산자 주민조직이라는 점이다. 최근 조직되는 친환경 작목반의 경우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메뚜기 쌀 작목반은 선출된 대표에 의해 주도되는 주민자치형 생산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스스로가 자립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메뚜기쌀 작목반에서는 매년 생산된 전량의 쌀을 판매하고 있는데, 작목반의 수매가격은 농협가격에 비해 40k한가마를 기준

⁹⁾ 작년 하반기에 수확될 당시에 필자가 산청을 찾았을 때, 작목반에서 직접 수확된 농산물을 관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농산물 중 질이 떨어지는 쌀은 그 자리에서 포장을 제거한 후 자체 내에서 소비하도록 하고 있었다. 관리에 불만을 가진 주민도 있었으나, 메뚜기 쌀이라는 전체 브랜드의 질을 떨어뜨리면 안된다는 대표의 설명에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으로 10,000원가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산자로서는 작목반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마을 이사로 활동 중인 L씨의 (61)의 경우, 비료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는 200평당 10가마를 수확했으나 현재는 7개를 수확하게 되었지만, 농가의 소득은 오히려 30%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뚜기작목반의 참여요건은 친환경 유기농 농사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작목반에 소속된 생산자가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나라이 병충해로 쓰러질 때는 원망도 많이 했지요. 약을 몰래 치려고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농사짓는 땅이 1900평쯤 되는데, 처음에 유기를 800평으로 시작했지만, 친환경으로 전환한지 올해 15년이 되는데, 올해는 유기 1600평, 전환기 300평을 짓고 있어요.” (생산자 L씨 인터뷰 자료 중)

주민들이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라고 한다. 특히 이사 직책을 맡아 다른 지역의 농업인들을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면 모두가 차황면을 부러워해서 마을 대표로서 자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고 한다.

“교육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내가 초등학교 나왔는데, 이제는 박사가 안 부러울 정도라니까요. 하도 교육을 받아서... 여름엔 특히 일이 많은데, 일이 아무리 많아도 교육 있는 날은 다 던져두고 와야 된다니까요. 아마 1주에 한번은 꼭 교육을 했을 겁니다. 새로운 교육을 받으면 마을에 돌아가서 마을 식구들에게 교육의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데, 모두가 잘 배워요.” (생산자 K씨 인터뷰 자료 중)

초기의 유기농 전문교육을 통해 김경규 회장과 부산Y는 품질을 인증받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깨닫고, 작목반이 결성되기 이전부터 농민들이 경작 일지를 매일 작성하도록 했다. 유기농을 가장 먼저 시작한 주

민 중 하나인 김광석씨의 일지를 보면 1989년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빠짐 없이 매일의 농사일지와 교육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했고, 이러한 기록이 바탕이 되어 많은 농가가 유기농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앞으로 성장해 갈 방향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메뚜기작목반의 대표들은 쌀 수확량과 공급량, 앞으로의 수요 마련 등을 고민하던 중 유기농 공품의 일본 수출을 위해 2002년부터 일본 유기농 인증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2개의 마을을 선정, 지난 5년간 일본 유기농인 자스(JAS: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일본 농림 규격)인증을 준비했다. 선정된 마을은 2002년부터 년 2회 이상의 자스인증농가 교육을 시작했다. 5년간의 준비 끝에 메뚜기작목반 소속의 차황면 창평마을과 신촌마을 2곳은 2007년 12월에 일본의 OCIA(The Organic Crop Improvement Association)로부터 유기농산물 외국생산과정 관리자 인증서(Foreign Farm Products Producer Organic Certification)를 받게 된 것이다. 이 인증을 가진 유기농 가공물은 상품에 인증 표시를 붙일 수 있으며, 일본으로 공식 수출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유기농 인증을 받은 곳은 전라도가 지원한 화순지역의 2곳과, 경남의 발농사 지역 1곳이 있으나, 수도작이면서 집단적으로 인증을 받은 곳은 차황면이 최초로 기록되었다(「경남 도민일보」, 2008.1.10). 일본 인증을 원하는 농민들을 직접 만나 교육을 담당해 온 경상대학교의 홍혜경 연구원은 필자와 만난 자리에서 재배기술과 자재선택, 제조와 수확이후의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차황면과 비교되는 곳이 없을 정도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교육에 임하는 주민들의 자세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 농민들이 금전적 목적으로 관심을 가지는데 비해 작목반 주민들은 의미를 찾고, 필요성에 대해 공부하는 자세를 보이는데 놀라움을 느꼈다고 한다.

“워낙 일본의 유기농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일본 유기농 인증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농가의 집안 구석구석에 파리약 하나라도 농약으로 의심되는 것은 다 찾아내는 정도니까요. 다른 지역에 가서 일본 인증과정을 이야기하면 다들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나? 차라리 농사를 안 짓고 말지.”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야기 하면 먼저 대안을 말씀하세요. 트랙터가 논에서 나와 창고에 올 때 먼지 하나 있어서도 안된다고 하니까, 논에서 나오는 길에 바퀴를 씻는 곳을 어디에 만들까 고민하시더군요. 교육을 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는 다른 데 비해서 앞서 있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예요. 일본에서도 와서 그 점에 크게 놀라워 하더라고요.”(홍혜경 연구원 인터뷰 자료 중)

실제 일본의 유기농 인증의 효과가 주민들에게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나, 어려운 준비과정에서 주민들이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동력은 작목반에 대한 신뢰가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인증 농가로 선정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신촌마을 대표 김동주씨(60)의 경우 기존의 친환경 경작 일지 이외에 자스 교육과 활동일지를 별도로 써야 하는데도, 그 번거로움보다 자스농가로 선정되었다는 자부심이 준비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었다고 한다.

담당 연구원도 처음엔 선정된 마을들이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아닐까 했으나, 확인한 결과 다른 마을보다 친환경 농업에 더 열심히 해서 선정되었다는 자긍심 외에는 다른 반대급부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식 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에 개정된 국내의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거,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하는 국가사업에 차황면 일대의 친환경 순환마을 사업을 부산 Y와 연대로 제출, 유기 축산을 겸한 순환농업지구 형성 사업을 시작했고, 그동안의 활동이 인정되어 2007년도 11월에는 농림부와 환경부 공동주관의 친환경 농업대상을 산청군이 받았다.

6) 지역공동체조직의 과제와 전망

메뚜기쌀로 친환경 브랜드를 확보한 차황면은 2005년에 부산Y와 연대하는 생태마을로 창평마을을 지정하고, 차황면 전체를 친환경지역으로 선포하는 선포식을 가졌다. 생태마을(Ecovillage)은 서구의 공동체운동에서 비롯된 개념이다¹⁰⁾. 녹색연합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시작된 생태마을운동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위로 ‘주민’을 설정하며, 주민이 주체적인 삶, 지속적인 삶을 통해 세대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외부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 발전하는 모델을 상정하고 있다(녹색연합 1998). 생태마을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생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관계성)과 문화·영적인 측면을 함께 포함한다(이근행, 2006). 즉 유기체적인 순환과 생명성을 마을공동체의 모든 요소에 포함하여 인간과 자연 및 지구를 함께 고려하는 의식적 차원이 생태마을의 기본 이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차황면은 순환농법과 유기축산을 결합한 친환경 순환마을을 만들기 위해 유기축산 사업을 시작했다. 생태마을의 외적인 조건은 마련된 것이다. 또한 부산Y에서는 생태마을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조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차황면이 생태마을운동을 시작한 것은 친환경 농업으로 시작된 지역공동체에 대한 내·외적인 요구가 마을공동체의 문화와 영성적 측면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부산 Y의 생협운동의 성장과정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15년간 지속된 부산Y의 생협운

10) 생태마을을 주창한 지구생태마을네트워크(GEN)에서 펴낸 『Ecovillage living』에서는 생태마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다른 사람 및 생명체, 그리고 지구와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유지하려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의미한다. 생태마을의 목적은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을 사회문화적 환경과 결합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구조로서의 생태마을은 오늘날 도시와 농촌으로 대변되는 이분법을 뛰어넘는 것으로 생태마을은 21세기 인간 정주 계획과 재조정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Hildur Jackson & Karen Svensson 2002)

동은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초기의 운동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와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지향형 운동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산Y와 차황면 공동의 생태마을운동은 도농 간의 문화적 교류 차원을 넘어서 상호신뢰와 동등한 관계설정에 의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한 삶의 소통과 유대의 진정한 지역공동체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부산Y는 리더십 형성과 조직기반 확대, 주민자치조직의 형성에 기여했다. 생태마을 프로젝트는 자립기반을 마련한 차황면이 대안적인 공동체의 질적인 성장을 가짐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부산Y와 함께 이룬 공동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생태마을의 지경과정에서부터 생태마을 구성의 내용적 합의까지의 구체적인 협의가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자칫 선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생태마을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산Y와 차황면 주민들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상의 삶을 생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부산Y 역시 현재의 생협운동이 처음부터 생협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때그때 문제의 발굴로부터 운동이 확장된 것이므로, 지속적인 운동의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방향 설정을 포함한 더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생태마을의 선언을 출발로 부산Y와 차황면 지역공동체는 농산물의 직거래 뿐 아니라 지역의 환경, 문화, 교육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작했으므로, 창평마을을 시작으로 모든 차황면의 친환경 생산지가 생태마을의 지향과 실천의 담론을 생산하고 이루어갈 수 있어야겠다.

4. 맺는 말

지난 17년간 부산Y가 지역공동체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운동이라는 이념적 지향과 생협조합원 및 일반 회원으로서 운동에 참여하고 지원한 활동가들의 참여의지, 그리고 6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부산Y가 세운 지역조직으로서의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산Y의 지역공동체형성과정은 내부의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반회원과 이사, 위원, 소비자로서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을 통해 운동에 대한 의식적 공유가 먼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인 이사회와 회원 총회가 이 운동의 지속적인 지원을 결의할 수 있었다. 다음 단계에서 부산Y는 지역의 자원과의 연대를 통해 친환경, 유기농운동과 접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차황면이라는 마을 공동체와 만나게 되었다. 부산Y에 의해 핵심 리더십과 운동의 방향성을 찾게 된 차황면은 자체의 독립적인 자치조직을 결성, 지역공동체가 주민들에 의해 성장하는 성과를 갖게 되었다.

차황면의 메뚜기쌀 작목반은 유통과 판매 등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유지했으므로 보다 용이하게 주민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속된 주민교육과 체계적인 조직운영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하게 했고, 스스로가 문제의 해결자로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게 했다. 또한 마을의 다양한 축제와 부산Y를 통한 도시 소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마을주민들은 다양한 경험과 문화적 교감을 가질 수 있었다. 부산Y와 차황면의 지난 17년이 주민들의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하고 자립적인 지역의 경제, 문화적 체계를 갖추는 기간이었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생태마을 운동은 시민운동과 지역이 만나 대안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새로운 과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시민운동이 장기간 추진한 운동의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변화의 궤적을 살펴보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시민운동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찾고자 하였다.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일한 사례를 분석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비교조사를 통한 깊이 있는 이론적, 실천적 함의의 도출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또한 사례지역의 현황과 주민들의 개별 삶의 모습 및 공동체형성 과정에 따른 구성원들의 의식변화 과정은 다루지 못했다. 시민단체의 관점에서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기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사례연구가 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지역공동체운동은 지역공간을 주민들이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김찬호 2000)이라는 정의에서 보듯 지역공동체운동은 공동체성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을 창조하고 지켜가는 과정이다. 지역공동체운동은 단발적인 문제의 해결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구성하는 작업이므로, 결코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랜 기간 동안의 소통을 통한 상호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 안에서 만이 지역공동체를 지원하고 형성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역공동체형성의 노력이 다양한 시민운동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1. 단행본 및 논문

- 경향신문특별취재팀. 2007. “시민단체, 뿌리 잃은 풀뿌리 운동.”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 휴머니티스.
- 김선미. 2007. “시민운동의 위기담론과 발전방안: 시민사회 지형변화와 관련하여.” 한국비영리학회 2007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비영리학회.
- 김상민. 2005.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와 NGO』. 3(2).
- 김영정. 2006. “지역사회 공동체의 재발견: 공동체복원 및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학회 기획학술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사회학회.
- 김찬호. 2000. “일본의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의 전개와 주민참여.” 『도시행정학보』. 13(11). 95-115.
- 김태연. 2007. “지역농업 추진주체의 형성 및 발전과정-아산시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의 사례.”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5(2). 한국유기농업학회.
- 녹색연합 편. 1998. 『생태마을지침서』. 녹색연합.
- 농림부. 2005. 『친환경 쌀의 재배유형별 생산, 유통, 소비 구조분석과 경쟁력 재고 방안』. 농림부.
- 대한YWCA연합회. 1995. 『YWCA의 생활협동운동사례집』.
- 마쓰오 다다스 외 저. 2006.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 (전략편)』. 한울.
- 문순홍. 1992. “생명운동의 이념, 전략, 그리고 그 한계.” 『현상과 인식』. 56.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박주원. 2008. “대안 공동체론에 나타난 ‘대안’ 개념과 ‘공동체’ 개념의 정치사상적 성찰.” 『역사비평』. 2008년 봄.
- 부산YWCA. 2006. 『부산YWCA60년사』.
- 성경룡 외. 2004.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비전과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시민자치정책센터. 2002. 『풀뿌리는 느리게 질주한다』. 갈무리.

- 오현철. 2003. “시민참여 유형의 변화와 의미.” 『시민사회와 NGO』. 창간호. 49-81.
- 이근행. 2006. “한국 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미. 2005.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시민사회와 NGO』. 3(1). 173-289.
- 이재열. 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회 기획학술심포지엄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재활성화를 위하여』 자료집. 한국사회학회.
- 전병재. 2002. “공동체와 결사체.” 한국이론사회학회 겨울워크샵 자료집. 한국이론사회학회.
- 정은미. 2006.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4(2). 한국유기농업학회.
- 정진성. 1996.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체로서의 생활협동운동.” 『경제와 사회』. 1996년 여름호. 한울.
- 조대엽. 2007. “공공성의 재구성과 전환기 한국NGO운동의 전망.” 한국비영리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비영리학회.
- 주성수 편저. 2006. 『한국시민사회지표』. 아르케.
- 최병두. 2006.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 방안.” 『지리학연구』. 4(4). 513-528.
- 하승우. 2007. “한국의 지역사회와 새로운 변화 전략의 필요성.” 『경제와 사회』 2007년 가을호. 한울.
- 행자부. 2007.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연구』. 행자부.
- Hillery, G. 199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 Hildur Jackson and Karen Svensson (ed.). 2002. *Ecovillage Living*. Gaia Trust, Green Books.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Toennies, Ferdinand. (trans. by Charles P. Loomis). 1957. *Community & Society*. New York: Harpen & Row.

2. 조직 보고서 및 기타 자료

부산YWCA. 「부산YWCA 총회 보고서」, 1986-2008년.

차황면 메뚜기쌀 작목반. 「친환경 농업일지」, 1989-2007년.

한살림. 「사단법인 한살림 제21차 정기총회 자료집」, 2007-2008년.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by Civic Movement –Ecologically Friendly Village
ChaWhang, ShanCheong County by Busan YWCA

Sung-Hee Yoo

Changes of local community by civic movement only can be achieved through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Even if the old civic movement emphasized the on-site concept, it was not focus on local community movement due to its process that was not initiated by local residents. As it were, activities in the past, such as temporary campaign or resident mobilized program, couldn't give a positive motive to local residents to play a major role as initiators or participators of the community.

Busan YWCA, a civic organization located in Busan,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was selected for this study in consideration of some successful achievements. The local community movement by Busan YWCA transformed the village ChaWhang, ShanCheong County, into ecologically friendly area through sustainable efforts in many ways for 17 years like direct contracts of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a city and the village. This will show that civic group can take a major role for creating social capital, and building trust with mutual communications also to be a core factor to keep up and improve a local resident participated community.

Key words : community movement, local community. life cooperation community,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leadership.